



정책좌담회

사면초가(四面楚歌)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일 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후 2시30분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 로 그 램 】

시 간	주요 내용
14:15~14:30	등록
14:30~14:35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회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건양대 교수)	
14:35~15:50	주제 : 美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미관계 :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한·일관계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한·중관계 :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종합 토론 :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15:50~16:00	질의 응답

【 목 차 】

주 제 발 표

- 위기의 한국외교 : 한미관계 ————— 09
김 열 수 (성신여대 교수)
- 사면초가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 한일관계 ————— 11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중국의 북핵 및 사드배치 대응방식과 한중관계————— 13
이 지 용 (국립외교원 교수)

2017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②

사면초가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외교분야의 아젠다와 과제-

주제 발표

[주제발표①]

위기의 한국 외교: 한미 관계

김 열 수
성신여대 교수

■ 초 불확실성의 시대

○ 다보스 포럼의 역설

- 시진핑 주석이 자유주의 무역 강조, 기후변화 협약 지켜야 한다고 주장

○ End-Game 상황

- 양적완화, -금리
- 마지막 한수: Brexit

■ 트럼프의 인식

○ 70여년 이상 자유주의, 세계화 외쳤지만 오히려 더 가난

- 제조업은 Offshoring, 무역 통해서 적자만 늘어났음

○ 70여년 이상 동맹 중시 외쳤지만 동맹들만 더 부자

- 미국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부채만 쌓였다고 파악

■ 트럼프의 비전과 비전 달성 방향

○ Make America Great Again

○ America First

■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 트럼프의 경제정책

- 보호무역주의, FTA 재협상, reshoring, 국경세, 인프라 투자
- 트럼프의 경제 라인: Peter Navarro, Steve Mnuchin, Wilbur Ross, Robert Lighthizer
- 억만장자, 보호무역주의 신봉자, 반중주의자

○ 트럼프의 안보정책: peace through strength

- 국방비 1조 달러 증액
- sequester(자동예산삭감) 폐기, 육군 49만 명 -> 54만 명, 함정 270 -> 350척, 공군 전투기 1100대 -> 1200대, 해병대 23개 대대 -> 36개 대대로 증강

- 트럼프의 외교 안보 라인: Michael T. Flynn, Mike Pompeo, James Mattis, Rex Tillerson
- 군인 출신, 이들의 성향이 대부분 매파, 즉 강보수

■ 트럼프의 대한민국 정책

○ 한미 FTA 재협상

- 재양적 협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 Navarro: “한미 FTA로 9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 “한미 FTA의 집행규정(enforcement provision)도 불충분하다. 한국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은 2.5%의 관세 부과뿐”
- Ross: 한미 FTA는 실패한 협정,
 - *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대차대조표 따지고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 2018년 협상 예정
- 틸러슨 국무장관과 메티스 국방장관이 동맹의 의무와 책임 강조
- 간접비 제공, 평택 기지 제공,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비율, 분담금/GDP
- 버티기 보다는 얼마나 긴 기간을 통해 100% 제공할 것인가
- 반대급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핵폐기물 재처리 허용, 우라늄 농축 기준 상향 조정, 3000t 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원화- 달러 간 통화스와프 체결,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한미미사일 정책 수정(800km로 묶여 있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확장)

■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

○ 트럼프의 인식

- 공화당 정강: 김씨 일가의 노예
- 미치광이, 햄버거 대화, 중국의 어린이

○ 국무/국방장관의 인식

-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 통해 북한 침략 대응
-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 어떤 방안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북핵 정책

- plan A(제재와 레짐체인지), B(선제공격), C(핵동결), D(중국 지렛대)
- Plan B? Plan C?

대북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정책공조 필요

[주제발표②]

사면초가 한국외교, 해법은 무엇인가? - 한일관계

남 광 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지난 1월 9일 일본의 주한대사와 부산총영사가 작년 연말에 진행된 부산 소녀상의 건립에 항의하여 일시 귀국하면서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한일 간에 이루어진 〈한일위안부합의〉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베총리가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아베총리의 사죄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1993년의 고노담화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 수준이다. 법적 책임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책임과 일본군의 관여를 말함으로써 외교적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강제성에 대한 완곡한 내용을 담았다. 외교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당시 〈한일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합의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미해결된 위안부문제가 그 동안의 논의들 중 가장 발전한 내용으로 합의된 점도 평가해야 한다. 이 점은 당시 합의 직후 대만을 비롯해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관련 협상을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따라서 위안부문제합의를 백지화시키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합의내용에 비해 잃을 것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최근 〈한일위안부합의〉를 훼손하는 망언들과 행동으로 인해 어렵게 이뤄진 위안부협상이 현재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는 위안부 합의문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별개의 사안이고 그리고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의 일본 외교공관 앞에 그리고 독도에 굳이 새로운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의 대사 소환조치는 부산 소녀상 건립이 〈한일위안부합의〉에 비판적인 일본 내 비판을 새롭게 증폭시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범죄행위는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국내정국과 관련해 올 대선에서 위안부합의와 소녀상을 쟁점화해서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여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가는 현실에서 한일관계가 계속 냉각되

고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이 확대되면 한국은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 특히 ‘탄핵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급속하게 변하는 동북아국제관계에서 한국 외교의 ‘위기,’ 혹은 ‘실종’이 피부로 느껴지는 최근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아베정부의 역사부정과 독도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따라서 역사문제와 외교안보에서 필요한 한일협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일 공식 출범한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또한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군사역할 증대와 ‘보통국가화’를 위한 비용 부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는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요 국가다. 양국이 과거에 메여서 발전적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제발표③]

중국의 북핵 및 사드배치 대응방식과 한중관계

이 지 용
국립외교원 교수

1. 북핵 및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행태

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행태

○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인 공식입장과 조치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과 불안정 발생 방지(不战、不乱) ▲한반도 비핵화(無核)를 핵심내용으로 전형화된 행위패턴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북핵과 관련해 6자회담 등을 통해 상황관리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으나 동시에 자국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서는 회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보여온 지금까지의 대응행태와 그 특징을 정리하면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력과 압박을 가하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걸쳐 약한 고리에 집중하면서도 자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접근행태를 보이고 있음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

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국역할론

○ 북한 및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변수의 중요성”과 “중국역할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역할”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함

나.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

○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압력 및 간섭시도는 향후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태도와 행동을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한국이 굴복할 경우, 중국은 보다 쉽게 한반도 사안에 간섭과 개입을 시도할 것임

- 중국의 사드 배치 대응에는 한국의 생존과 안보에 대한 존중과 고려를 발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향후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안보문제에 중국이 취할 태도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의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외교적 압박 중 각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사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타격가능성 언급임.
- 중국의 이와 같은 논리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한국의 잠재적 적국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엄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재검토와 관련해 고려해야할 사안은 첫째, 향후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둘째, 한미동맹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중국의 압력과 보복위협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 2017년 예정된 사드배치 시점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강도는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바, 정부는 동 사안이 한국의 주권과 외교, 향후 한중관계 및 한미동맹에 주는 중요성을 감안 국민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대내적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임

나. 중국의 보복행태를 냉정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 중국은 문화강국 육성차원에서 자국 문화산업 보호방침을 이미 세우고 있었음

- 동 사안은 중국이 사드 배치 이전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취한 자국산업 보호 사례의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으며, 사드 배치 논쟁 이후 오히려 이를 한국에 대한 여론선전전에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반도체, 자동차 등 자국이 한국에 비교열위에 있어 여전히 이용가치가 있는 산업은 배제하고 있음

○ 한국은 중국에 대한 산업별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정부/기업 차원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중국의 기술도용 등에는 WTO, FTA 등을 활용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음

다.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야

○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전방위

적 파상공세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대안 마련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차분하게 돌파했다는 것임

- 지정학적 근접성과 지경학적 상호의존성으로 향후 장기간 관리해야할 한·중 관계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일시적 시련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방식으로 한·중 관계를 설정할 때 보다 건강한 한·중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됨

MEMO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